

주주 80만명 국민株... 이슈는 박재완 사외이사 선임

(前 기재부장관)

삼성 주총 D-1, 관전포인트는

소액주주 vs 대주주 표 대결 '귀추' 사외이사 선임 관련 '독립성' 논란 '전자투표제' 여전히 도입 검토중

한국 '증시 대장주' 삼성전자 정기 주주총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번 주총은 액면분할 이후 처음으로 소액주주와 대주주의 표 대결, 사외이사 선임 등 '독립성' 문제 등이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액면분할 후 첫 주총... 소액주주 목소리 높아질까

18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정기 주총은 20일 오전 9시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빌딩 5층 다목적홀에서 열린다. 주주 참석을 제한하고 관심을 분산한다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 주총이 열린 오는 22일 금요일을 피했다. 삼성SDI와 삼성SDS 등도 같은 날 주총을 연다.

삼성전자의 이번 주총 안건은 ▲재무제표 승인 ▲사외이사 선임 ▲감사위원 선임 ▲이사 보수한도 등이다.

삼성전자의 이번 주총은 지난해 3월 50대 1 비율의 발행주식 액면분할 안건 통과 이후 처음이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주총에서 지난 1975년 6월 11일 유가증권시장 상장 이후 처음으로 액면분할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액면분할 이후 주가는 급락했지만, 주주는 대폭 늘면서 '황제주'에서 '국민주'로 탈바꿈했다는 평가다.

먼저 지난해 250만원에 달하던 주가가 50분의 1로 내려가면서 일반 투자자 접근이 수월해졌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삼성전자 실질주주는 지난해 말 78만8000여명으로 전년 대비(15만8000여명) 5배 늘었다.

삼성전자는 주주가 늘어남에 따라 이번 주총 자리를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린 800석을 마련할 예정이다. 주총장 옆 주좌석에는 중계 설비도 갖추기로 했다.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연합뉴스

다만 주총장 분위기는 삼성전자에 우호적이지 않을 수 있다. 소액주주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이들이 경영진·대주주 기업 운영 건에 맞서는 등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또 주가 하락과 함께 실적 부진, 주주 친화정책 등에 대한 불만도 우려되는 실정이다.

삼성전자 주가는 지난해 4월 말 5만 3000원대에서 지난 1월 3만6000원대까지 떨어졌다. 반도체 시장도 악재를 맞으면서 올해 1분기 실적도 지난해 같은 분기(15조6422억원) 절반인 7조원에 그칠 것이라 전망이 나온다.

이런 실정 등을 고려했기 때문에 올해 10월까지인 이재용 부회장의 사내이사 임기 연장 안건도 이번 주총에서 빠졌다는 게 재계 중론이다. 대법원은 현재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뇌물공여 혐의 최종 심리에 들어간 상태다. 다음 달 대법원 상고심 판결 후이나 이 부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등 거취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기관투자자 '반대' vs 기업 '소신'... 사외이사 선임

삼성전자는 이번 주총에서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장관을 사외이사로 재선임하고, 김한조 전 하나금융지주 부회장과 안

〈삼성전자 정기 주주총회 안건〉

1호	재무제표 승인	50기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등 재무제표 승인의 건
2-1호	사외이사 선임	박 재 완 후보 재선임 김 한 조 후보 선임 안 규 리 후보 선임
2-2호	감사위원 선임	박 재 완 / 김 한 조 후보
3호	이사 보수한도	사내이사 5명 사외이사 6명 대상 총 465억 원

규리 서울대 대외 교수를 신규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했지만, '이사회 독립성' 논란은 여전하다.

박 전 장관의 경우 지난 2016년부터 삼성전자 사외이사로 활동 중이다. 1996년부터 성균관대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기도 하다. 성균관대는 삼성그룹 소속 공익법인으로 분류된다.

일부는 박 전 장관 재선임에 대해 독립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한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지난 15일 '국내의 주요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사전공시' 내역에 따르면 캐나다연기금투자위원회와 국내 의결권 자문사 서스틴베스트·대신지배구조연구소 등은 사외이사 독립성을 지적하며 '반대'를 권고했다. 성대 교수직이 삼성전자를 포함한 기업 총수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다.

안 교수도 '사외이사 반대'에 직면했다. 안 교수는 지난 2017년 삼성전자 특수관계법인 호암재단에서 사회봉사상 부문 호암상을 받았다. 당시 상금은 3억원과 순금 50톤 메달이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장이 지난 17일

삼성전자 주총 안건에 대해 "아쉽다"고 발언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대기업 상장사 추세인 '전자투표제'를 도입하지 않는 것도 구설에 오른다. 삼성 전자는 지난 2010년 전자투표제가 처음 시행된 이후 9년째 도입을 검토 중이다.

반면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는 이번 주총 안건에 대해 '찬성' 의견을 내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국민연금은 현재 삼성전자 지분 10%를 보유하고 있으며 단일 기관으로는 삼성전자 최대 주주다.

이외에도 이번 주총에선 유보 현금 사용에 대한 주주의 질의·요구도 이어질 것이라 전망이다. 삼성전자의 사내 유보금은 지난해 말 기준 104조2100억원이다. 2017년 말(89조6000억원)과 비교하면 약 14조6000억원 늘었다. 다만 인수·합병은 지난 2016년 11월 음향 전문 업체 하만을 80억달러(약 9조5000억원)에 인수한 이후 잠잠한 상태다.

/석대성 기자 bigstar@metroseoul.co.kr

靑 국민청원... 공시가 제한 법안도

» 1면 "조세저항" 거센 반발...서 계속

시장 '잡잡'... 당분간 거래 절벽 지속

이처럼 공시가격 인상에 대한 반발 여론에 거세지자, 가격 인상폭을 제한하는 법안도 잇따라 나오고 있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현승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표준지 공시지가를 산정할 때 전년 대비 변동률, 다른 지역과 형평성, 특수성 등을 의무 고려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 가격공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도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및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공시할 때 직전연도 공시가격의 3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냈다.

◆"조세정의 실현"...실효성은?

반면 무주택자 등 일각에서는 공시가격 인상이 조세 정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청와대 국민청원에서도 한 청원자는 "집값은 수억 원 올랐는데 세금은 수십만 원 오른셈"이라며 "투기근절하려면 공시가격을 더 올려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 일부 무주택자들은 이번 공시가격 인상

으로 세금 부담을 느낀 매수자들이 매물을 내놓으면 급매 등을 잡을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

정부도 공시가격 인상 기초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최정호 국토부장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현재 우리나라 집값 수준은 선진국과 비교하면 아직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대해서 "시세가 급등했거나 상대적으로 장기간 저평가됐던 유형과 가격대의 부동산은 빠른 속도로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고 상대적으로 현실화율이 높은 중저가는 서민 부담을 감안해 점진적으로 현실화를 추진한 것"이라며 "이는 조세정의와 공정과세에 부합하다"고 밝혔다.

아파트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부동산 시장은 일단 잠잠한 모습이다.

서울 용산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공시가격 인상은 예상했던 수준이라 크게 부담을 느끼고 매물을 내놓는 주택 보유자들이 드물다"라며 "당장은 증여 등 다른 방법을 알아보는 이들이 많기 때문에 당분간 거래 절벽이 이어질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채신화 기자 csh9101@

당신의 봄

대한민국 모두의 안전한 365일을 위해

천만다행

예상치 못한 일이 가득한 하루 하루지만
정신 없는 출근길부터
포근한 잠자리에 드는 그 순간까지
당신의 생활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할테니까

삼성화재라서 천만다행

당신에게 좋은보험 삼성화재 SAMSUNG